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순서

군정질문

● 질문자 : 이흥희 의원

● 질문자 : 김향란 의원



거창군의의회

GEOCHANG COUNTY COUNCIL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4. 11. 03.(월)
- 질문의원 : 이 홍 희 의원
- 질문내용
 1. 범조타운 유치과정 및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2. 거창구치소 시설과 관련하여
 3. 향후 추진계획 및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4. 11. 03.(월) 10:00 ~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답변자	비고
이흥희	1. 범조타운 유치과정 및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2. 거창구치소 시설과 관련하여 3. 향후 추진계획 및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군 수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4. 11. 3.(월)
- 질문의원 : 이 홍 희 의원
- 질문내용
 1. 법조타운 유치과정 및 사업대상지 관련
 - ① 법조타운 내 설치 기관 및 과정 관련 사항
 - ② 인근지역 학교 입지 및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
 2. 거창구치소 시설 관련
 - ① 수용인원, 규모 및 증축 가능성 관련 사항 등
 3. 향후 추진 계획 및 갈등 해소 관련 등
 4. 보충질의
 - ① 인구감소 및 재산권 침해, 행정절차 관련 사항
 - ② 군비 소요예산, 주민투표, 경제적효과 관련 사항

답 변 자 : 거 창 군 수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질문요지

1. 법조타운 유치 과정 및 사업대상지 관련
 - ① 법조타운 내 설치 기관 및 과정 관련 사항
 - ② 인근지역 학교 입지 및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
2. 거창구치소 시설 관련
 - ① 수용인원, 규모 및 증축 가능성 관련 사항 등
3. 향후 추진 계획 및 갈등 해소 관련 등

□ 답변요지

- ① 법조타운 내에는 지원·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 이전 계획이며, 추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을 협의 중
- ②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은 거창읍의 외곽지역이며, 학교로부터 서북쪽 뒤편에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③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사례에 비해 일반적인 수준이며, 교정시설에서 가까울수록 범죄발생률이 낮은 것이 사실
- ④ 2011년부터 범군민 서명운동 등 대대적 홍보를 해 왔으며, 그간 총 123차례의 언론보도, 13의 군의회 보고 등 공개적으로 추진해왔음
- ⑤ 사업대상지 추천에 대한 법무부의 2회 반려지시는 사실과 다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1회 전달하였음
- ⑥ 사업대상지에 투기를 했다는 주장, 추진위원회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찬성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임
- ⑦ 거창구치소 수용인원은 400명이며, 지원·지청은 이전부지 세부 조율단계에 있어, 부지 확정 즉시 조성 공사 착공 예정
- ⑧ 학부모 심리적 우려 해소를 위해 아카데미파크사업과 연계, 파출소 치안센터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도입을 추진 중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군수님]

□ 거창군수 이 흥 기입니다.

○ 이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법조타운 내 들어설 기관과
그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내 설치될 국가기관은
거창구치소가 신설되고,
법원 거창지원과 검찰청 거창지청이
이전·신축됩니다.

○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도 이전·신축할 계획입니다.

- 전체 범조타운은 200,418m² 부지규모로 조성되고, 거창구치소는 160,818m²이며, 이 중 순수 수용시설은 22,500m²입니다.

- 이와 함께 지원·지청 33,000m² 보호관찰소 3,300m², 유치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3,300m² 규모입니다.

- 금년 국가예산에 지원·지청 설계비가 9억4천6백만원 반영 되어 있으며, 교정시설은 2012부터 2014년 현재까지 16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등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 또한 보호관찰소는 2015년 토지 매입비 5억8천만원이 중앙정부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이 이 일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거창구치소 사업대상지가 ‘학교 앞’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으로써 한센인에 대한 편견, 축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외부인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의 발길조차 뜸하던 거창읍의 ‘외곽’지역입니다.
- 최근 성산마을의 입장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덕 하나를 넘으면 사람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 언제부터 학교 앞이고, 주거밀집지역이며, 거창의 중심이었습니까?
- 성산마을의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 성산마을을 가 본 사람은 더 적을 것입니다.

- 성산마을은 수십년간 개발에서 소외받아온 거창읍 최악의 환경, 최대 낙후지역이었습니다.
- 사업대상지와 현대·대경·주공 등 아파트단지, 대성일고, 대성고, 중앙고 등 학교 사이에는 구릉지 및 야산이 위치하여 이 지역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창구치소는 현대아파트 서북쪽 뒤편에 500m이상 떨어져 설치될 계획입니다.
- 반대단체에서는 거창구치소 설치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 학부모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학교앞 교도소 OUT’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 보시면 이곳이 정말 거창의 중심이고, 학교 앞이며, 주거밀집지역인지 진실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3.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와 교육시설간의 거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가기반시설인 전국의 많은 교정시설이 주변 학교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습니다.

○ 최근 법조타운화 추세에 따라 서울문정동, 인천 학익동 등 기존 시내 중심에 교정시설이 설치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창구치소는 학교 등 교육시설 및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 조사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부지 중심에서부터
1km 반경 이내 위치하는 학교는
총 5개소이며,
일부 주장대로
구치소 전체 부지의 우하단을 기점으로 해도,
반경 1km 이내 위치한 학교는 11개가 아니라
총 7개입니다.

- 전국 교정기관 중 반경 1km이내
학교가 위치한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0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8개 기관입니다.

- 이와 같이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할 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 또한 구치소·교도소가 있음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학교가 신설되고
성동구치소와 같이
담장 하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개의 학교가 위치하는 것은
교정시설이 곧 위험시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구치소 출소자들로 인한 자녀 위해,
지역 치안 악화 우려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심지에 위치한

대다수 교정기관 주변에는

학교·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교정기관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학생·주민 안전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교정시설로 인해 주변이 우범지역화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거창구치소는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S2급 이상의 경제·교통사범·과실범 등을 선별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거창구치소와 같이 S2급 이상 수용하고,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는

영월교도소의 경우

재수감률이 0.4%에 불과하는 등 재범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5. 법조타운과 관련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군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등교거부 등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출발할 당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으며
많은 군민들께 박수와 격려, 축구의 의지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소홀히 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갈등으로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군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반대의 목소리는 모두가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견과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게든 이 법조타운을 잘 추진하여 거창 미래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각 지역의 대표이자, 우리군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법조타운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치에 대한
군민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과 유치위원회에서는
범군민 서명운동, 면지역 순회설명회,
현대·상동·주공아파트 및
성산마을 설명회·간담회 등
대대적인 홍보를 수행해왔습니다.

- 법조타운 유치 촉구 서명을 받을 때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촉구 군민 서명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히 홍보물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와 같은 형식으로
교정시설이 설치됨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 범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신문·인터넷매체·방송 등을 통해
2011년부터 그간 총 120여 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조금이라도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면
범조타운 조성지 내 교정시설이 설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군민 대의기관인 제6대 군의회에
그간 13차례에 걸쳐, 사무감사, 예산승인,
업무보고,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범조타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숨김없이 명확히 공개해왔으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의회, 언론 등을 통해
군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 이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군민 개개인 모두에게
다 알리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숨겼다'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7.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중

법무부에서 2회 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유치 건의를 통해
교정시설 조기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가 시작되었고

- 우리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무부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교정시설 설치에 적합한 지역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현 사업대상지를 반대하거나
2번에 걸쳐 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1. 4. 21.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실무진이 현장실사 후
2011. 5. 18. 법무부 현장방문 결과 공문은
'거주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는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아 한센인 이전, 보상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부지 선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2011. 7. 8.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성산마을 일대를 교정시설 설치장소로 확정하고

- 2011. 7. 22. 교정시설 신축 계획을
거창군에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8. 법조타운 사업대상지에 대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등에서 투기를 했다거나 하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투기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조타운 조성지(지원·지청·교정시설) 전체 사유지 260필지 200,418m²에 대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총 68건, 163,706m²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 내역별로는

향교에서 성산마을에 불하건이 25건 36,066m²,
상속 14건, 32,023m²,
증여 4건, 9,848m²,
매매가 25건, 85,769m²입니다.

- 이중 매매 25건 중
 성산마을 이외 소유자들 간 매매는
 13건, 21필지 63,762㎡이며,
 특정시점에 집중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도별로 1년에 1~2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통해,
 통상적인 일반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 SNS 및 향간에 떠도는
 군수, 국회의원, 유치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의 토지 거래는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주장들이
 SNS등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군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위원과
법조타운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 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법조타운 사업을 통해
어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10. 남상면의 레미콘 공장과
법조타운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레미콘 공장과 법조타운은
별개의 사안으로
역시 근거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시는 분이
유치위원장과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레미콘이 필요한 공사는
관급과 사급으로 나눌 수 있고
법조타운 관련 공사 자재의 경우
관급에 해당됨에 따라
유치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1. 법조타운 유치서명부의 서명과 관련한
고소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를 비롯하여 현재 부서장, 전임 부서장,
담당계장 및 당시 읍·면장 등 공무원과
유치위원회 회장단 4명이
법조타운 유치서명부 관계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12. 공무원의 상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26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 반대군민들께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고, 회의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공무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팔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제가 해당 공무원의 고소를 만류한 것은, 물론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범죄이나
- 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과의 충돌을 고소나 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해당 공무원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재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 거창구치소의 면적 및 수용규모와
지원·지청 이전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구치소 전체 면적은 160,818m²이며,
약 140,000m²의 밀양구치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거창구치소의 순수 수용시설 면적은 22,500m²로
법조타운 전체 면적 200,418m²의 10.20%,
교정시설 전체 면적 160,818m²의 14%에 불과합니다.
- 순수 수용동을 제외하고는
외부가 직원관사,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체육시설, 녹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들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신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5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구치소는 수용인원 400명의 전국 최소규모이며,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인원을 보면 평소 35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용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800명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법상 50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이 아닙니다.
- 전국에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교정시설을 증축한 사례는 없으며, 증·개축 역시 우리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말씀드렸듯이 지원·지청 이전은
국가 예산으로 2014년 기본조사용역비 등
9억4천6백만원을 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5년 2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현재 법원·검찰청 부지 위치는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었으나,
서쪽으로 이동 여부 등
세부 조율 단계에 있으며,

-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예산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사업 백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사항으로,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전체 7필지 14,376m²에 대해
2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예산 33억원 중
부지보상비 11억9천만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11월 중에 성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에 있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입니다.

○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또한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백지화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등교거부 사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등교거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 지난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10. 7. 1차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듣고 간극을 좁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 말씀드린대로 범조타운 사업은
공사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단계로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되돌리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 향후 법무부, 안행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해소하고, 거창에 적합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학부모 우려 해소 방안 및
대화·소통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치소 설치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사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며 기우에 불과합니다.
- 사실 거창경찰서 내 대용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이 출소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혹시나 싶은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먼저 법무부 및 거창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조타운 지역에 치안센터를 신설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학생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 법조타운 인근 개설될 도로를, 국도 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출소자가 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추진 중입니다.
-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 대중교통이 있는 새벽시간까지 교정시설 내에 머물게 하고, 교정 공무원 또는 지역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터미널, 기차역 등 대중교통이 있는 지역까지 함께 이동 후 승차까지 확인하는 방안 등
- 출소자가 지역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거창읍 북쪽 10개 학교 밀집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로등, CCTV, 학교지킴이실, 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확충하여
학생·지역민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앞으로 대화·소통 노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군에서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대측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대화자체가
안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군에서는 범대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관련 행정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으며,
관련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거창구치소와 관련된 근거없는 사실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반대측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리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군은 현재에도 부군수를 대표로 관련 부서장들이 반대측 대표단과 함께 하시라도 대화와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 (보충질문) 거창구치소의 기결수 수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국의 모든 구치소는 미결수의 세탁·취사 등 기관 운영을 위해서 기결수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통상 200~300명의 기결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의 경우에도 구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미결수보다 기결수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즉, 지방 중소도시의 구치소의 경우, 구치소임에도 기결수를 수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거창구치소 역시 설치 목적은 구치소이지만, 기관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기결수도 수용하여 교도기능 역시 겸하고 있습니다.

18. (보충질문) 현재 성산마을의 분노악취가 예전만큼 심하지 않고, 두세가구만 축산업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1. 7. 22. 성산마을에 교정시설 신축결정이 된 후, 우리군에서는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법조타운 중 교정시설 신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입식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성산마을 주민들도 그간 악취에 대해 거창군민에 사과의 마음과 법조타운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축 입식을 자제하여 축사를 폐업하고, 축사대여도 금지해 왔습니다.
- 성산마을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에도 법조타운 사업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축사 악취가 예전처럼 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19. (보충질문)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유치과정의 서명운동과 서명부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군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 법적 행정절차는 교정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열람 공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공보 개제 등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절차를 한 치의 빠뜨림 없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20. (보충질문) 교정시설과 인구 감소,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정시설 신설과 지역 인구증감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구 변동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인문·정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설치'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반대측에서 예로 제시하는

영월군·청송군의 경우 군 단위 지역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반적 현상입니다.

- 교정시설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경남의 함양, 합천, 산청, 의령
경북의 봉화, 의성
전남의 담양, 진도, 충남 태안 등의 인구 감소는
-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도시 인구증가,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며
교정시설 설치로 인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반대로 원주, 청주 등 시 지역의 경우
교정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습니다.
- 우리군이 법조타운을 통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한 것은
교정공무원·가족 및 관련기관 신설 등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절대적 수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부에 공식 질의 결과,
교정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 서울 문정동·인천 학익동과 같이
법조타운으로 인해 지역 브랜드화로
오히려 가지리 지역 가치가 상승될 것입니다.
- 특히, 신축 교정시설 개청 이후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 보면
인근지역 지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영시의 경우 지가 변동률이
시 전체는 103.6%이나,
구치소 인근 부지는 127.3%

- 밀양시는 시 전체는 104.6%,
구치소 인근 부지는 122.5%

- 영월군은 군 전체는 101.7%
교도소 인근 부지는 134.6% 등

- 최근 개칭한
5개 교정기관 주변의 지가 상승률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우리군은 지원·지청과 함께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됨에 따라
지가 등 재산권과 인근지역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보충질문) 법조타운 소요 준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전체 사업비 1,725억원 중
소요준비는 도합 193억원 정도이며
지원·지청 부지 조성에 70억원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33억원
인근지역 도로개설 90억원이 소요됩니다.

- 소요준비 중 지원·지청 이전·신축 관련
부지 조성 준비 70억원은,
우리군에서 부지 조성 후
현재 지원·지청 부지와 1:1교환 형식으로 추진하여,
현 부지 소유권이 우리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실질적 준비 소요는 없습니다.

- 도로개설 사업비 준비 90억원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법조타운 사업 이전부터
기 개설 계획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 기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 및
지원·지청 이전 관련 준비를 제외하면
순수 법조타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준비는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비
33억원에 불과합니다.

- 이와 같이 소요준비는 도로, 이주단지,
법원·검찰 부지조성비이며
순수한 법조타운 조성에는
준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22. (보충질문) 주민투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과 그간 판례 등에 따르면
구치소 신설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 같은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해도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 특히 법조타운은 지난 지방선거 시
군 전체에 쟁점화되어
선거과정과 결과를 통해
군민의 심판을 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3. (보충질문)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내 신설이 확정된 시설인
거창구치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직원·가족 및 등 상주인구
약 1,000여명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10억 및 취득등록세, 주민세 등 세수
확대와 재정 인센티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구치소 건축에 따른 건설업, 인력파견업,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생산유발효과
821억원
- 구치소 직원 및 가족의 소비에 의한
음식료품업, 요식업, 농업 등 생산유발효과
100억원

- 시설관리 및 보수, 차량유지·보수, 직원, 수용자 식자재 구입비용, 시설유지비, 운영경비 등 31억원
-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생산유발효과 20억원, 접견인,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이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억원
- 구치소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건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고용유발효과 150억원 등 1,000여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 또한 교정시설 내 시설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게 되고, 지역인재 특별채용, 가산점 등 형식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 이처럼 교정시설과 법조타운 설치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경제유발효과, 무수한 비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런 사유로 현재 영월군수님과 청송군수님께서서는 교도소를 하나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24. (보충질문) 현재 거창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총 1,114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특히 학교폭력사건 97건, 소년사건 48건 등 청소년 층과 관련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 같이 청정도시임에도 범죄가 발생하고, 교육도시임에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가 설치됨으로써 범죄가 증가하고 우범화 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며, 심리적인 불안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5. (보충질문) 반대측 시민단체에서
거창교정시설 설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
교정시설 관련 행정 절차로
2013. 7. 10 개최한
제6회 거창군계획위원회 당시
교정시설에 대한 거창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 푸른산내들, YMCA 등
현재 법조타운 반대 운동에 관계하는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위원회를 통해
거창교정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와서 뒤늦게 '몰랐다'며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데 대하여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4. 11. 03.(월)
- 질문의원 : 김 향 란 의원
- 질문내용
 1. 학교 인근 교도소 유치시설 관련 사실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4. 11. 03.(월) 10:00 ~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답변자	비고
김향란	1. 학교 인근 교도소 유치시설 관련 사실	군 수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4. 11. 3.(월)

● 질문의원 : 김 향 란 의원

● 질문내용

- 학교 인근 교도소 유치시설 관련 사실

1. 군민서명부 작성과정·역할, 유치위원회 결성·활동 과정, 이장단 모임(11.2.9.) 관련 사항
2. 설명회·공청회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 및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데 대한 견해
3. 관련 정보 공개 및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견해
4.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자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
5. S2급·경제사범 수용과 군민 안전에 대한 견해
6. 등교거부 관련, 분당과 거창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태도와 방식에 차이에 대한 견해
7. 영월교도소 설치 과정 반대의견과, 거창읍내 17개교 학교 분포 상황에 대한 견해
8. 과도한 토지보상비와 국세 낭비 관련 견해

답 변 자 : 거 창 군 수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질문요지

- 학교 인근 교도소 유치시설 관련 사실

1. 군민서명부 작성과정·역할, 유치위 결성·활동과정, 이장단 모임 (11.2.9.) 관련 사항
2. 설명회·공청회 미실시 문제 및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데 대한 견해
3. 관련 정보 공개 및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견해
4.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자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
5. S2급·경제사범 수용과 군민 안전에 대한 견해
6. 등교거부 관련, 분당과 거창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태도와 방식에 차이에 대한 견해는
7. 영월교도소 설치 과정 반대의견과, 거창읍 내 17개교 학교가 분포하는 상황과에 대한 견해
8. 과도한 토지보상비와 국세 낭비 관련 견해

□ 답변요지

- ① 법조타운 사업 필요성 공감하는 군민이 모여 유치위 결성, 서명운동, 순회설명회, APT호별방문 등으로 30,000여명의 서명을 얻었고, 서명부는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아니며, 이장단 모임은 법조타운 설명을 위한 것
- ② 거창군은 교정시설 관련 법적 절차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투명하게 추진, 사업백지화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어려움
- ③ 해당 언론조사는 특정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여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갈등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④ 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거창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 역시 복지·권리보호와 함께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 역할도 수행
- ⑤ 거창구치소는 경제사범 중 S2급 이상만 수용 계획이며, 교정시설에 가까울수록 범죄발생률이 낮아 오히려 더 안전한 것이 현실
- ⑥ 등교거부는 부모의 책임이며 분당사례와 거창의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⑦ 유사한 사례의 타 단체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교정기관 설치 사례를 볼 때 일반적인 사항임
- ⑧ 거창구치소 토지보상비는 적법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으며, 군의회에는 조례제정, 사무감사 등 13차례에 걸친 보고가 있었음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군수님]

□ 거창군수 이 홍 기입니다.

○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인근 교정시설 신설 관련 사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3만 주민서명부와 유치위원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무부에서 재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1. 4. 21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실무진이 현장실사 후 2011. 5. 18 법무부에서 현장방문 결과공문에는 '거주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는 양호하나,

지장물이 많아 한센인 이전, 보상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부지 선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2011. 7. 8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성산마을 일대를 교정시설 설치장소로 확정하였고

- 2011. 7. 22 교정시설 신축 계획을 거창군에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관련공문이 공개되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2013년 4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경남도 출장결과 보고서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시 경남도 담당계장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내와 가까워 타당성 검토가 필요

한센인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 유무 검토 필요
주거지역 주민에 충분한 설명 필요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 교정시설 차폐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2012. 6월부터 2013. 4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
거창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성산마을과는 충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 12월 및 2011년 2월
현대·대경·주공APT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
교정시설 차폐와 관련하여서는,
설계에 남측 30m 차폐녹지 반영 등
협의사항을 충실히 조치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 그 결과 2013. 9. 27.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서명부와 관련하여

일부 사정에 따라 대필서명을 가지고
서명부가 조작되었거나,
공무원이 조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저를 비롯한 공무원, 유치위원회 등이
서명부와 관련해 고발사건이 진행 중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사항입니다.

○ 유치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법조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고
2011. 2. 14.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 법조타운 유치의 열망을 모으기 위해

2011. 2. 14.부터 3. 4.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유치위원회에서는
읍면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등이 주축이 되어
로터리와 농협중앙회 앞에서 가두서명을 받았으며
- 또한 APT단지 등에서도 호별방문 서명 및
관리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서명을 받았고
- 관내의 농협, 병원, 각 기관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 행정에서는
군의 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유치위원회의 서명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이와 같은 전 군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군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서명부의 역할은

2015년 이후 계획된 교정시설 설치계획의 조기 시행에 대한 군민의 바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이며,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설치나 지원·지청 이전에 필수적인 법적 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말씀하신 2월 9일 거창읍 이장단 모임은 일부러 모았던 자리가 아니라 정례 이장회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이나 읍의 중요 사업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장회의 때 읍장,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마을이장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정시설설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부지선정, 부지매입, 실시설계, 건축까지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위탁한 사무는 부지보상 사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법적절차인 거창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 교정시설) 결정추진 사항은

법무부에서 2012. 6 ~ 2013.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3. 5월 거창군에 제출하여
거창군에서는 2013. 5. 8 일간지 7개사에
거창군 관리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를 게재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2013. 7. 10 거창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 7. 2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2013. 9. 27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결정되었으며

2013. 10. 17 경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우리군에서는
2013. 10. 28 거창군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013. 10. 30 거창군 공보게재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2013. 7. 10 교정시설 설치 결정을 위한
거창군 관리계획위원회 자문 시
시민단체인 YMCA, 함께하는 거창,
푸른산내들에서 위원으로 참석·심의하여
교정시설 설치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럴듯한 법조타운으로 과대포장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창군에서는 처음부터 법원, 검찰, 교정시설을
한데 묶어 타운화하여 성산마을 일대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법조타운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민설명회 역시
성산마을 주민 설명회 3회,
현대·대경·상동주공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
유치위원회 읍·면 순회설명회
아파트 호별방문 설명 및 서명 등
충분한 설명과 홍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 이같이 우리군에서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거짓 없이 추진해 왔으며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켰고,
 설명회, 대대적 서명운동, 언론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께 충분히 알려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업백지화와 관련하여 거창구치소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사항으로,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비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를 앞두고 있으며

-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전체 7필지 14,376m²에 대해
2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예산 33억원 중
부지보상비 11억9천만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11월 중에 성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에 있는 등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입니다.

- 당초 법조타운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이
성산마을의 축사 악취에 따른
지역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또한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이 이루어졌고
2015년 이후에는 국가계획에 의거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백지화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여론조사·정보제공 관련 사항과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당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1. 선생님께서는 거창군 관내에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 건립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2.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가
11개 학교와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결정이다. 나쁜결정이다. 잘모르겠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 질문의 내용이 사업배경·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 따라서 해당 조사 결과를
군민 여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거창군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 “법조타운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추진 찬성이 54.19%, 추진 반대가 36.34%

2.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의 유치과정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알았다 54.09%, 몰랐다 39.09%

3. “법조타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된다 58.36%, 안된다 32.17% 등

서경신문 여론조사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에서는 그간 범조타운 관련 정보를
축소·왜곡하는 경우 없이
정확하게 공개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국책사업의 경우
군민들에게 정보의 일부분만 주거나
왜곡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들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숨기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해
우리군은 2012. 6. 22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의 갈등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
향후 우리군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법조타운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교육도시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하였으며
- 또한 출소자에 의한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S2급 이상 수형자만 선별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함을 건의하여,
지난 8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8월 교정시설 견학 제의
9월 토론회 참여의사 타진
10월 1일 등교거부를 막기 위한 사전모임 제의 등
그간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 왔으나
반대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2014. 10. 6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2014. 10. 7 회담을 가졌고,
- 범대위측 요구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등교거부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후 범대위측에서는 KBS, MBC
방송토론 거부 등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언론보도 관련 사항 및

공무원노조·의회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군에서는 어르신이나
사업을 어느정도 아시는 분 구분 없이
법조타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개인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법조타운을 찬성하고
젊은분들은 사업을 알아서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각 언론사에서 찬·반 보도비중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현행 헌법 상
우리군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도 없는 사항이며
추진위원장에 언론인이 있다는 것 역시
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지
우리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군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의 최종정책결정 기관이며 군민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입니다.

- 그간 의원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군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군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 군의회의 자성이 있어야 할지는 군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집행부의 장인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 공무원들의 권익대변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적법한 법률의 토대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내부 공무원 조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권리보호, 사기 진작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 및 불법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공무원 노조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구입니다.

- 거창군과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공동의 발전을 위해 거창군과 함께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조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노조차원의 자성의 문제는 노조측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5. 거창구치소에 수용될 S2급 이상 수형자 및
경제사범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구치소는 영월의 사례와 같이
경제사범, 교통사범, 공무원사범, 과실범 등
양질의 재소자인
경비처우등급 S2급 이상의 수형자와
수형기간 5년 이내 수형자를 선별·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거창구치소에 모든 경제사범이 수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S2등급 이상을 받은
수형자만 수용한다는 것이고,

특히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배임 등 경제사범은 수용하고
파렴치범은 수용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앞서 이홍희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교정시설이 들어와서 위험할 것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사례나 조사 결과를 볼 때
역설적으로 교정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등교거부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당시 등교거부 상황에 대해
거창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써
분명한 유감표명을 하였으며
- 기자회견에서 2011년 이래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조타운'이란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등교거부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지원·지청이 있는 곳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국가시설인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동원하여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의문이며

- 교육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거창에서
교정시설과 재소자·출소자에 대한
적대와 편견을
소중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으며
법조타운과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권리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반대측에서 역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교거부와 같은 행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성인들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포항, 분당 등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거창법조타운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그간 반대학부모단체측에서 법무부 방문 시에는 법무부에서도 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댄다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영월군수님 초청 특강은 거창구치소와 유사한 S2급 이상 수형자를 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영월교도소 설치 과정과 지역갈등 극복, 교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함이었으며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반대측에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은 데이터나 근거없이 막연한 이야기들이나, 영월의 경우는 군민들이 직접 체험되었고 근거나 데이터가 있기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타 단체장의 의견에 기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영월교도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교도소 추가 유치를 요구할 정도라는 부분으로 교정시설이 일부 우려만큼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 거창법조타운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이 밀집하게 되어, 경제적 효과, 지역개발 등 이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교정시설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읍내 17개교 학교 중 사업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거창구치소 중심을 기점으로 대성일고등학교로 직선거리로 560여 미터 떨어져있으며, 그 외 반경 1km이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반대위측에서는 평면도만 놓고
구치소 부지 끝에서 쯤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와 APT단지 학교사이에
야산 및 구릉지가 존재하여
학교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 반대측 주장대로 구치소 전체 부지의
우하단을 기점으로 해도,
반경 1km 이내 위치한 학교는
11개가 아니라 총 7개입니다.
- 조사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1km이내 학교가 위치한 기관은 34개 기관이며,
10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4개 기관,
5개 이상 10개 미만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8개 기관 등으로,
거창구치소는 일반적인 수준의
학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향란의원님께서도 서울 남부구치소와
원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주교도소의 경우 지역에 아파트 단지,
주택가등이 밀집해 있으며,
남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앞 어린이집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가
교정공무원들의 자녀들보다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정시설이
주변 학교와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학습권 침해 사례는 없습니다.

8. 토지 보상비 및 국비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구치소의 대지규모는 160,818m²이며,
사업비는 약 822억원,
그 중 보상가는 약 260억원 정도입니다.
- 2004년부터 추진된 광주교도소는 대지규모
330,000m², 사업비 1,147억원, 보상가 186억원,
- 2002년부터 추진된 장흥교도소는
대지규모 49,000m², 사업비 423억원,
보상가 13억원 정도이며
- 각 교정시설의 사업비·보상가는
사업시기, 규모, 지역 여건이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상가는 당해 토지간의 지역적 제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등에 의한 개별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평가하므로
그 토지가 지닌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거창구치소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주택·축사 등 지장물로 인하여
보상가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성산마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보상가는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성산마을 주민들께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분들이 이주단지로 이전하여
그 보상비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등

- 적법 절차를 통한 보상비가
타 지역 교정시설 설치 사례보다
다소 높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구치소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나 학교 앞이 아니라
거창읍 시가지의 외곽입니다.

-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학교밀집지역이라는 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교정시설 사례를 비추어볼 때
일반적인 정도이고

-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 소관부처인 법무부 역시 법적·현실적 검토 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대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배경은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의 축사로 인한 고질적인 악취 해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출발하였습니다.
-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말씀드린대로 토지가격이 높고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과다하여 채산성 문제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도시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나날이 쇠락해가는 농촌지역의 여건 상,
국가사업의 유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반대측에서는 성산마을에
왜 교정시설이나
동화마을이나 어린이도서관 등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군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군 사업으로 성산마을 주택, 축사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우리군은 2015년 이후
기왕에 들어올 교정시설과 함께
지원·지청을 묶어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함으로써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성산마을 일대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거점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6대 군의회 당시
법조타운 관련 보고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주례보고 1회, 조례제정 1건,
행정사무감사 3회, 세입세출예산편성 3건,
군정질문 2회, 업무계획보고 3회 등
그간 총 13차례에 걸쳐
6대 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 11. 16. 법조타운 구상(안) 주례보고
- 2013. 9. 25. 제 195회 임시회를 통해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 11. 29. 2011년 행정사무감사

교정시설 설치 확정 및 예산반영 사항보고,
향후 관련기관 이전 신축 예산 확보계획 보고

2012. 11. 28.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원·지청 이전·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확보 활동 보고,
성산마을 이전 계획 보고

2013. 7. 22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원·지청 이전·신축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확보 활동 보고,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세입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2013. 10. 10. 제196회 임시회

‘13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거창지원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매입비 등
36억원 승인

2013. 11. 29. 제197회 임시회

‘14년 본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 등

21억원 승인

2014. 3. 10. 제199회 임시회

‘1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등
36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 다음 균정질문으로

2012. 5. 29. 제183회 임시회

백범영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

2013. 4. 26. 제191회 임시회

강철우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유치 관련 그간 노력, 향후계획 및
한센인 이주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다음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1. 10. 11. 제180회 임시회
유치위원회 활동사항 및
교정시설 설치 확정 사항 보고

2012. 10. 17. 제187회 임시회
거창지원·지청 이전 관련 활동 및
향후 예산확보 방안 관련 보고

2013. 10. 13. 제196회 임시회
교정시설 관련 진행사항 및
관련 기관 이전 예산 확보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법조타운은
관련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 사무감사, 조례제정 등
보고를 거친 사항입니다.